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

과장 정은영, 사무관 김세필
(044-200-2341, 2348)

정부,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 상황 점검

- 인명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-

□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국무조정실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로 7월 23일(월)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「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」를 개최하고, 각 부처별 폭염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.

*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국토부, 해수부, 소방청 참석

□ 오늘 회의는 기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폭염 대비 정부 대책의 현장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, 8월 중순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전망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

○ 행안부는 폭염기간 중 지자체 일일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예방·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관계 공무원이 폭염 현장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(체크리스트)를 마련하여 폭염 대응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

- 산업부는 예비력 단계별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, 폭염 등으로 인한 주택 정전 사고시 복구 및 안전점검을 위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도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습니다.
 - * 콜센터(1588-7500) 주택전기 긴급출동 고충처리(전기안전119) 제도 운영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24시간 긴급출동('17년 65,831개소 복구지원)
 - 복지부는 독거노인·노숙인·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, 농식품부·해수부는 가축·양식어류 폐사 방지를 위한 현장 컨설팅·지도 강화 등 소관분야 폭염 피해 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키로 했습니다.
 - 국토부는 기존 철도분야 폭염 대책에 추가하여 아스팔트 용기 등 폭염으로 인한 도로 피해에 대해서도 관제센터를 통한 지속 모니터링 및 순찰 등을 강화키로 했습니다.
 - 또한, 온열질환자 119응급 출동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행안부·문체부 등은 국민행동요령과 관련된 종합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.
- 노형욱 국무2차장은 각 부처별 폭염 대책과 오늘 논의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- 특히 무엇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들께서는 낮시간대 야외활동 자제, 충분한 수분 섭취, 무더위 쉼터(전국 약 45,000개) 활용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.